

너무 늦은 정의...소송 3명 숨진뒤 '승소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 '2차 소송' 9년 10개월만에 대법서 승소 미쓰비시·일본제철 유족 1명당 1억~1억5천만원 지급해야 유족들 "판결이라도 보고 가셨더라면 한이라도 풀었을텐데..."

"어머니께서 판결을 보고 돌아가셨더라면 한이라도 풀고 가셨을텐데..." 일제 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동원된 광주출신 故 양영수 할머니의 딸 김정옥씨의 하소연이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1940년대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모두 4명으로 일본에서 1944년 숨진 오길애씨를 제외하고 양영수(1929~2023년 5월), 심선애(1930~2019년 2월), 김재림(1930~2023년 7월) 할머니는 판결을 기다리다 고인이 됐다. 이들은 2014년 2월 광주지법에 1심 소송을 제기해 9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당사자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시제철소와 아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 7명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 당사자는 4명으로 모두 광주·전남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다. 피해 당사자는 양영수, 심선애, 김재림 할머니와 일본에서 1944년 숨진 오길애씨다. 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44년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강제로 끌려갔다. 13~14살의 나이에 은종일 군용 비행기 부품품을 만들고 비행기 동체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혹사했다. 일본에서 중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렸으나 해방 이후에도 어렵게 살아온 이들은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광주대성초등학교 1회 졸업생인 양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일본인 선생의 권유로 14살이던 1944년 5월께 일본에 건너갔다.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심 할머니도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꾀안에 넘어가 양 할머니와 같이 일본에 건너갔다. 1944년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옛 능주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삼촌집에서 가사 일을 돕던 김 할머니도 일본 모집책이 일본에 가면 '밥도 배부르게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일본으로 향했다.

목포 산정초등학교를 졸업한 오씨도 같은 사연을 안고 미쓰비시에 끌려갔다. 다만 오씨는 1944년 12월 도난카미 대치전으로 공장 건물터미에 깔려 숨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 3명은 모두 소송을 제기해 한 마음으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기다렸지만, 대법원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날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세월 동안 학수고대하며 이날만 기다렸을 원고들과 함께 판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판결이 이뤄지는 사이 피해자이자 원고 할머니 3명이 차례로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현재 대법원에는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사건뿐 아니라 양금희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이 계속 중"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재판과정에서 고인이 된 광주·전남지역 피해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대법원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2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940년대 강제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각 6개와 4개의 상고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범기업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결국 2018년 이후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불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교복입찰 담합 교복 대리점주 29명 벌금형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가를 담합한 광주지역 교복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9명에 대해 각 300만~12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7차례 중 289차례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개별 학교에서 낙찰받은 업체와 투찰가를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가족들 명의를 빌려 여러 교복 업체(사업자)를 만들고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교복 업체들의 교복비 상한가 상승 요청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복부 공급 가격은 해마다 1%대 인상되거나 동결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결국, 원가상승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업체들의 난립으로 빚어진 부작용의 하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낙찰가 담합으로 인해 교복 구매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장실서 여자친구 살해 전 해양경찰관 징역 25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전 해양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A(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출소 후 특별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새벽 5시30분께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말투를 문제삼자 다들 곁에 화장실까지 뒤쫓아가 혼전시키고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가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서 "119신고를 했더라면 피해자가 충분히 소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목포·백영길 기자 kyl@

검찰 '사건 브로커' 수사 전직 경찰관 등 2명 구속영장

'사건 브로커'를 수사중인 검찰이 인사 청탁을 위한 뇌물 전달 혐의로 퇴직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퇴직한 A 경정과 지인 B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직위해제된 C경정의 인사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퇴직한 D전 경감(구속)에게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전 경감이 이를 사건브로커 성모(62)씨를 통해 지난달 경기도 한 아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E치안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성씨는 수사무마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산자산 사기 사건 용의자로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E치안감은 전남경찰청장 재임시절 인사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E치안감 재직 당시 성씨를 통해 인사청탁한 10여명의 전남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B씨가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영상실질심사는 광주지법에서 22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 돌산 앞바다서 60대 실종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고무보트를 정박하려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20일 여수시 돌산을 우두리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A(62)씨를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A씨의 1.43t 고무보트가 항해등을 켜 채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보트를 조사하던 중 A씨 실종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항구 인근 CCTV를 통해 홀로 보트를 몰던 A씨가 항구에서 보트를 정박하려다 실족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